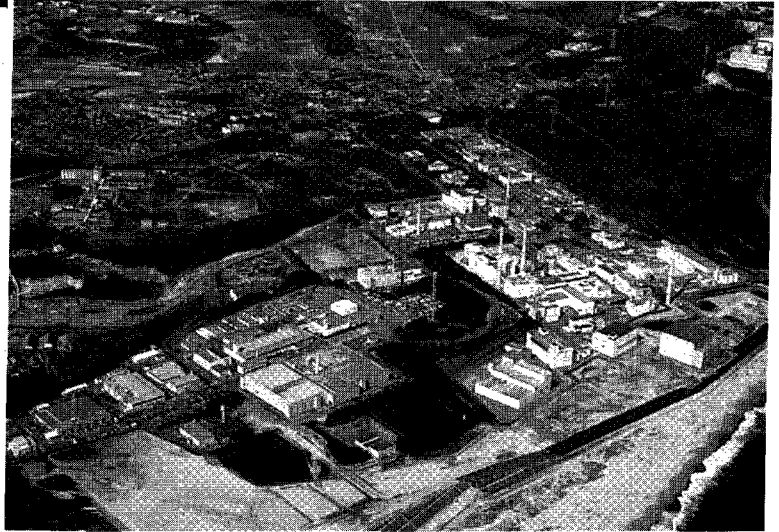


## 특집

### 韓·日原子力산업 세미나 발표 논문



〈일본 도오카이(東海)에 있는 플루토늄 핵연료 시설〉

# 原子力에 대한 일본의 사회·정치적 상황 80年代중반 反原電극렬, 사회당도 贊原電으로

모리 가스히사  
(森 一久)

일본 원자력산업회의

전무이사

## I. 日本의 反原電운동

일본의 反原電운동(舊派운동)은 주로 원자력발전소 인근주민, 급진주의자와 노동조합에 의해 발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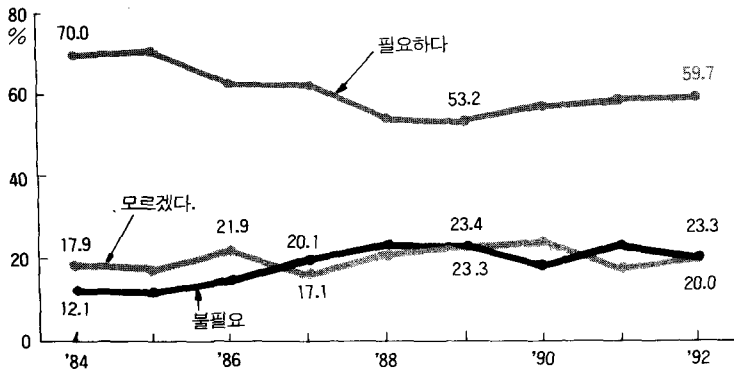
지역주민의 단합된 행동은 주로 신규 原電의 計劃 단계에 건설을 반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발전소 安全,

농·어업의 영향, 농수산물에 대한 좋지않은 風聞에 의한 부정적 영향, 주민건강의 영향 및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불안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한편, 새로운 反核운동(新派운동)은 체르노빌사고 발생 2년 뒤인 1988년 경에 시작되었는데, 원자력발전소 부지와 관련없는 가정주부와 대도시의 젊은층에 의해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 原子力에 대한 일본의 사회·정치적 상황

그림 1-① : 일본에서 原子力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런 새로운 움직임은 정서적·감정적 요소들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II. 신파운동의 출현

새로운 반핵운동은 체르노빌사고 이후 수입된 식품의 잔류 방사성에 대한 주부들의 막연한 걱정에서 출발하였다.

주부들은 잔류 방사성이 원전사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러한 것은 일본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연결지어 생각하였다.

이러한 감정적 불안은 1987년 4월에 발행된 「히로세다카시」의 “위험한 이야기”라는 책에 의해 더욱 가중되었는데, 이 책은 원자력발전의 공포에 대해 감정적이고 비과학적으로 記述하고 있다.

이 운동에 참가하는 일부 그룹들은 오늘날 풍요로운 물질사회의 에너지 다소비 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들의 활동을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反核운동은 대도시의 市民운동으로 방향을 잡아 나갔다.

또한 반핵운동은 소비자 운동단체나 전통적으로 市民운동을 주도해온 동조자들, 여성단체나 기타 여러 종류의 서클에 대한 가장 인기있는 활동의 하나가 되었다.

이런 그룹들에 의한 反原電운동이 新派運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 1,500여 개의 새로운 운동 그룹이 형성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널리 퍼져있던 「퍼스널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의해 그룹간 정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는데 이는 그룹간 단결력을 약화시킨 하였으나, 짧은 시간내에 反原電운동

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한편, 주간·월간지들이 판매부수 경쟁 때문에 반원전 활동에 관한 기사를 열심히 보도하였는데 이는 反原電 분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 III. 신파운동에 의해 얻은 결과

새로운 운동은 소그룹에 의한 活動의 종합체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활동은 1988년 4월 동경 히비야공원에서 개최된 “1988년 동경행동 선언: 원자력발전을 중지하라”로 발전되어 처음으로 전국적인 연합행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 집회는 흔히 “1만인 운동”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측에서도 참가자수가 많음에 놀라 나중에 “2만인 운동”으로 고쳐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집회 참가자는 7천명 정도였다.

또한 日本사회당이 사회당지지 노동조합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1만인운동”이 많은 주목을 끈 것은 짧은 시간에 P.C 통신에 의해 준비되어 열린 대규모 축제와 같은 집회였다는 점이다.

한편, 소단위 반원전그룹을 통합하고 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반원전력발전소법” 제정안이 제출되었고 각

## 특집 : 한·일 原子力산업 세미나 논문

「反原子力發電所法」制定 캠페인은 全國적으로 반원전 그룹들이 國會에서 同法제정의 壓力을 가하기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으로 발전되었으며, 서명활동은 '89년 1월에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서명을 받기는 힘들었으며, 주최측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3백5십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지만, 이 캠페인도 여기서 끝나게 되었다.

### IV. 地方의 新파운동과 社會黨

지방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움직임은 北海道電力의 「도마리」원전 가동 반대활동이었다. '88년 11월 발전소가 가동이 가까와 오며 따라 캠페인은 북해도 주민 투표에 의해 이 발전소를 가동이 가까와 오며 따라 캠페인은 북해도 주민 투표에 의해 이 발전소를

가동시키느냐, 않느냐를 決定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활동가들은 北海道 地方議會에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條例제정을 목적으로 請願을 위한 1백만명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운동은 주로 지역 新파운동 조직의 지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社會黨 北海道 지부와 산하 全北海道 勞動組合聯合(당시 조합원수 34만명)이 무대 뒤에서 적극 지원하였다.

그들은 103만명의 서명(지방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97만명 유효인정)을 7월부터 9월에 걸쳐 두달간에 받아 北海道 지방의회에 條例제정을 위한 청원을 하였다.

이 캠페인은 두달만에 北海道 주민의 20%에 상당하는 백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데 성공하였는데, 이는 말할 것도 없이 勞組聯合과 新派運動의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 條例제정안은 12월에 지방 의회에서 2표라는 근소한 차로 부결되었다.

그런 狀況下에서 反原電운동은 아오모리(青森)현에서도 적극적이었다.

1만명 데모가 벌어지고 있는 '89년 4월에 료카쇼무라의 핵사이클시설을 참가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에워쌌다. 많은 수의 사람들은 社會黨 산하 노조에서 동원되었다.

이 캠페인은 새물결운동이 쇠퇴하지 시작하는 무렵에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社會黨산하 노동조합원들 이었는데 대형버스로 현장에 도착하였다. 참가자수는 7,000명으로 보도되었다.

### V. 新파운동의 퇴조

'88년 여름 이후 이 운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점차 약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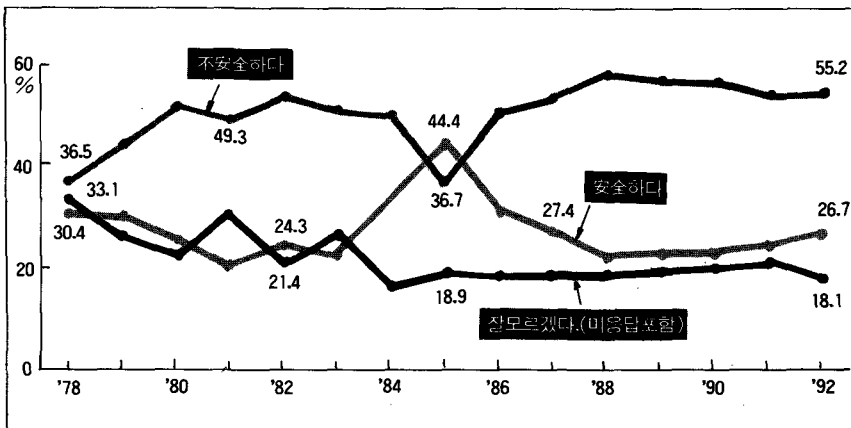


그림 1-② :

原電의 安全성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原子力에 대한 일본의 사회·정치적 상황

이 운동은 소단위 시민 그룹에 의한 활동으로 연대성이 강하지 않았고, 원전 주변 반원전활동가들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지 못하였다. 이 운동을 그밖의 특별한 목적으로 연결시킬 필요성을 표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 電力會社들의 홍보활동이 전기가 대규모 소비되는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쇼와」왕의 건강이 위독하게 되어 매스미디어를 포함한 국민들의 관심이 일본의 황실제도로 바뀌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이후 눈에 띄는 新派活動은 없어졌지만, 反原電활동은 점차 專門化되고 과격하게 되었다.

그들의 활동은 오랫동안 반원전 운동에 참여하였던 東京의 그룹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목표를 바꾸어 추진되었다.

株主總會에 참석하여 반대의안을 제출(그해의 東京電力 주주총회에 7건의 반원전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 效果는 얻지 못함), 아오모리 핵연료 사이클 시설 반대, 「몬쥬」고속 증식으로 반대, 새로운 核연료 수송반대와 플루토늄의 사용반대 등이었다.

### VI. 原子力 추진 기관들의 반성

이런 새로운 반원전운동은 전력회사를 포함한 원자력 추진 단체들에게 弘報活動을 어떻게 추진하여야 할 것

인지에 대하여 커다란 자극을 주게 되었다.

도시의 새로운 반원전운동에 대응하는 대책이 늦어지게 된 것은 전통적으로 원전 부지 주변에 대한 홍보가 중심이 되어, 대량의 전력소비중심지의 주민에 대한 홍보에 소홀하였던 것이다.

이는 대도시 지역이 대체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멀리 위치하고, 도시 거주자들의 원전에 대한 무관심 등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이 운동은 자연자원과 에너지의 과소비에 대한 경고를 주었다. 각자의 생활환경과 행동 및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을 추진하도록 再考하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 VII. 將來의 찬성과 반대

일본 사회당은 위에 설명한 신파운동과 함께 원자력발전을 계속해 반대하는 등 일본 반원전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여왔는데, '94년 9월 3일에 개최된 제61차 사회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사회당은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 새로운 대체에너지가 개발되기 까지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을 전통적에너지로 수용한다”고 표명하여 원자력발전을 용인하였다.

현재 건설중이거나 대체가 필요한 원자력발전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동지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중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공산당을 제외한 전 정당을 생각할 때 여당이 된 사회당이 원자력발전의 추진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원전 정책 전환은 원자력에 관한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견된다.

1993년부터의 政治的 變化 가운데 政界와 국민들은 사고와 같은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한, 원자력개발을 지지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래의 도전은 반원전활

그림 2-① : 原子力의 安全性·필요성·受容태도간의 因果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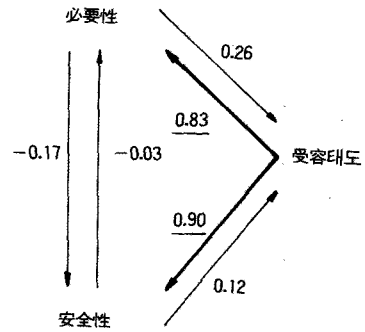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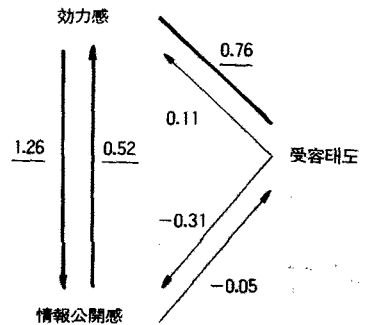


그림 2-② : 效力感·정보公開感·受容태도간의 因果모델



## 특집 : 한·일 原子力산업 세미나 논문

동보다 지지자들과의 대화에 역점을 두는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

비평가들은 이미 원자력 개발을 수용하는데 따른, 건설적인 제안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日本の 정치는 종전의 전통적 혹은 논리를 깨고 정책협정을 통한 새도 타협의 형태로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정치적 경향은 국방과 재정(세

금)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정치 상황에서 原電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原電에 대한 贊反운동이 처음으로 이런 상황을 맞은 것이며, 국방이나 稅金문제와 달리 原電開發은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 왔던 문제이며, 이 이슈는 일본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또한 1975년의 사회당 정책 질의응답은 “완벽한 운전관리 프로세스가 확립되고 방사성폐기물의 종국적 안전처리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 일본은 원자력발전의 가동 건설 및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原子力船 무쓰 포함)고 선언하였다.

그후 사회당은 지금까지 유사한 원자력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당의 反原電정책에로의 전환은 사회당이 다음과 같은 조직적 활동 목표를 잃어가는 가운데 나타났다.

환경공해에 관한 투쟁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쇠퇴하였고, 1970년 체결된 조약에 의해 美日안보조약에 관한 운동이 끝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970년대 초반 美國에서 ECCS의 컴퓨터 시스템 결함, 원자력선 「무쓰」 방사능 누출사고, 「미하마」와 「젠카이」 원전의 발전기 사고 등 중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반원전 그룹,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그룹이 반원전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사회당도 반원전으로 정책을 바꾸게 되었다.

사회당에게 원전주변의 반원전활동은 조직력을 강화시키는 적절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사회당이 反原電 경향을 확고한 정책으로 바꾸게 된 것은 「드라마일」 원전 사고였다.

이런 정책전환의 시기에 사회당은 '76년의 정책문답에서 “원자력발전이

## 일본 사회당 原電정책의 변화

### 1. 제1기(1954~1970)

사회당은 처음에 原子力의 平和的利用을 반대하지 않았다.

1954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60년대 후반까지 사회당은 “일본은 제한된 자원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1955년 12월 과학기술진흥정책의 일환으로 衆議院(下院)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원자력에너지 기본법」에 잘 나타나 있다. 이 法案은 自民黨과 社會黨의 공동제안으로 421명의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다.

원자력기본법 제2조2항초안은 당시 사회당의원과 당간부의 주도하에 준비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은 민주

적 방법에 의해 平和를 목적으로 원자력에너지의 연구·개발·이용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그 결과를 공표하여 국제협력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법은 1956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 2. 제2기(1971~1984)

비록 사회당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을 돕긴했지만 1972년경으로 反原電으로 그 政策을 전환하였다.

사회당은 1972년 1월에 개최된 사회당 전국대회에서 “원전건설 및 재처리공장 건설반대운동 촉진 결의”를 채택하고 1974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계획, 건설과 가동중지 및 재처리공장과 원자력추진함 건조 계획중지를 요구”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 原子力에 대한 일본의 사회·정치적 상황

사회주의 국가에서까지 건설되고 있는데 왜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소련은 일본에 비해 기초연구와 실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원전개발에 대단히 신중하다. 원자력문제는 정치·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생각할 수 없다. 독점적 이익을 내는 자본을 대표하는 원자로는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처럼, 원자력 평화이용 반대는 정치·경제 시스템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런 思考方式은 일부 사회당 간부에게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이념적 기반을 제공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견해는 1980년 정책결정의 책임있는 사람들에 의해 간행된 책에 명백하게 쓰여 있다.

그 저자들은 체르노빌 사고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후 사회당은 1979년 에너지 정책에서 “軟性에너지 30년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2010년까지 30%의 소프트에너지, 수입원유 30%, 석탄 사용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원자력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당은 그런 실현불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오랫동안 견지하였으며, 원자력에 관한 견해도 오랫동안 바꾸지 않았다.

### 1. 제37|(1985~1993)

위와 같은 정책 가운데서도 현실적

원전정책의 검토 필요성이 사회당 내에 싹트고 있었다. 이런 경향은 1985년의 49차 전당대회에 나타났다.

'79년 발표된 「30년전략」은 학자들의 검토를 거쳐 바뀌어 “2차 신에너지 30년전략”의 초안이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원전의 완전한 폐쇄정책은 거의 불가능하다. 좀더 현실적 관점에서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와 3,000MW까지 건설중인 발전소를 인정하는 대신 새로운 발전소의 건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계속 반대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대회에서는 “모든 원전 건설계획은 동결되어야 한다. 건설중인 발전소는 현재의 수급상황이 급박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안전대책은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에 추진되어야 하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사를 위해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사회당은 고속증식로의 건설, 재처리 공장, 우라늄 농축공장 및 폐기물처리장의 건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아가 당은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대회 후 12명의 사회당 의원들이 1985년 원전정책 검토를 위한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그들은 당간부들에게 원전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유인물을 만들어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활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또 위의 모임은 전국적인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주재하였는

데, 여기에는 전국통신노련, 기계노련, 철강노련, 전기기계 노련, 화학노련 등이 참가하였다.

이와 같이 이들은 자신들의 지지모체인 노동조합에 원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은 그들의 原電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1986년 체르노빌사고 이후 「원전폐기에 관한 제안」이 당 대회에 제출되었으며, 이와같이 사회당은 강한 반원전 정책을 고집하였다.

### 1. 제47|(1994~ )

사회당 원전정책에 관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4년 9월에 열린 제 61차 임시전당대회에서 美·日안보조약, 자위대 인정과 함께 원자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바꾸었다.

이는 사회당의 당수가 총리로 있는 여당으로서 위와 같은 정책을 인정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때문이다.

정당이 지금까지 日本에서 원자력 발전의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사회당이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그 정책을 전환한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반원전 활동을 전개해 왔던 모든 지구당들이 집행부의 정책전환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구당 원자력 에너지 문제에 관하여는 중앙당과 다른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